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번호	6489
------	------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교육시설과장)

1. 제출사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초 외 3교(만촌초, 평리초, 안심중)의 학교 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함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제4항 : 주무관청은 사업 지정고시하기 이전 지방의회 의결 필요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BTL사업(25%)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

- 2021년 제3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1년 제2차 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자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음
-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BTL 대상학교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구분	학교명	예정지	사업내용			비고
			사업면적 (㎡)	학급수	총사업비	
개축	동부초	대구 동구 신암북로7길 22	4,280	10	10,504	본관동
	만촌초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214길 33	3,425	17	8,407	본관동
	평리초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3길 6-5	5,328	40	13,076	교사A,B,C동
	안심중	대구 동구 안심로 237	5,683	19	13,948	후관,서관동
계	4교		18,716	86	45,935	7동

4. 의무부담행위 조서

가. 의무부담금액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사업명	사업면적 (㎡)	총사업비	의무부담액(20년간)		
			계	시설임대료	운영비
동부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18,716	45,935	71,160	62,639	8,521

※ 사업물량 및 사업금액은 사전기획용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간 (2025. 8월~ 2045. 7월 예정)

5. 향후 추진 계획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 2022. 10.
- 시설사업기본계획 RFP 검토 및 고시 : 2022. 11.
- 제안서 접수 및 질의 답변 : 2023.1. ~ 3.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2023. 4.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3. 4. ~ 2023. 9.
- 실시설계 및 승인 : 2023. 10. ~ 2024. 1.
- 공사기간 : 2024. 1. ~ 2025. 7.

- 붙임 1.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정액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연도별 정부 지급금 지급 예정액

1. 시설임대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시설임대료						연평균
	계	2024년	2025년	~	2043년	2044년	
동부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62,639	3,132	3,132		3,132	3,132	3,132

※ 사업수익률: 2.22% (5년만기 국고채 1.22% + 가산율 1.00%) 적용

- 5년만기 국고채: 적격성 판단시 기준 금리이며,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수익률에 적용

- 가산율(α): 위험보상율으로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2016년~20년까지 협약체결된 38개 사업(PIMAC,2021) 평균값으로 산정)

2.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운영비						연평균
	계	2024년	2025년	~	2043년	2044년	
동부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8,521	395	398		455	459	426

※ 산출근거: 최초년도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매년 0.80% 적용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4조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 ②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